

# ‘미투’ 이후 직장 성폭력·성희롱 여전

## 1년 간 1770건 피해 접수...61% 업무시간 발생 익명상담 1342건·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 428건

지난해 ‘미투(Me too) 운동’ 발생 이후에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17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장 내 발생한 사건의 61%는 업무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제118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여성정책연구원 발표자료를 의하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것은 총 1770건이었다. 이중 익명상담 요청은 1342건이었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는 428건이었다.

성폭력 관련이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170건), 2차 피해 관련(14건), 기타(10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공공기관에서 274건, 민간기업 등에서 154건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공공기관에서는 공직 유관단체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수가 101건으로 많았고 학교(77건), 지방자치단체(63건), 중앙행정기관(33건) 순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올 3월부터 설치·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서는 7월까지 총 11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가해자는 90.8%가 같은 직장 소속이었으며 상사·임원이 절반이 넘는 52.4%, 사업주·대표이사 27.1%였다. 가해자가 1명인 경우가 81.5%, 2명 이상인 경우 12.5%였다.

성희롱 발생 시기는 업무시간이 60.8%로 가장 많았다. 회사이나 워크숍이 24.4%였으며, 이 밖에 휴일이나 퇴근 이후 등 개인시간이 11.2%를 차지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8.5%가 신체접촉이나 추행이었다.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이 42.0%, 외모 평가 및 성적 발언이 18.8%였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회사의 대응도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가 진행된 것은 17.5%에 그쳤고 조사가 미진했던 것은 16%였다. 신고자가 느끼기에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응답도 4.3%였다.

실제로 한 회사는 외모 지적, 사적 만남 요구 등의 피해를 신고하자 상사가 피해자에게 업무상 부담한 대우를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실태

조사 후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을



코스모스 핀 길 따라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상 처서를 이틀 앞둔 2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서 코스모스가 핀 길을 따라 농기계용 탄 시인이 지나가고 있다.

## 내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전공 융합교육 가능

내년부터 직업계 고교인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전공학과와 다른 학과 수업을 함께 이수해 산업수요에 맞춘 인재가 양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정무서출처장 별관에서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마이스터고 51곳을 연구·신도학교로 지정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며 “미래 직업 세계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 이수 기준은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한다.

고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을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전환한다. 1학년당 수업량은 현행 50분 수업 기준으로 17회에서 16회로 줄인다. 1주일에 듣는 수업 시간이 34교시 가량에서 32교시 정도로 줄어들어 학사 운영에도 여유가 생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 결과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이수 단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학점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교

육과정으로 다양한 융합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마이스터고 도입으로 융합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전공학과는 물론 다른 학과 과목을 함께 이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과 학생이 기계과 과목을 함께 수강해 전자설비 보수원이 되는 형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신의 전공이 아닌 학과 과목을 최소 2학점 이상 들으면 부전공으로도 인정 가능하다”며 “산업계에 맞춘 다양한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과 내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해 직무나 자격에 맞춘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학과 내에서 개발 과정과 정보보안 과정도 세분화하는 식으로 학과 내에서도 직무 경로를 다양하게 세울 수 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인재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마이스터고 과목 개설에 반영할 예정이다.거점 학교를 지정해 최신 기자재 등을 구비한 공동 실습실을 설치하고 학교간 교류도 활성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체나 대학 등 지역사회 학습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생의 전공 실무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승인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실습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NCS와 연계되는 실습형 과목인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에 대해서는 최소 성취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참여 여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제도는 2025년 전면 도입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활한 학점제 안착을 위해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력 지원도 늘린다. 학생 진로에 따른 과목 개설 수요를 대비해 산업경력을 갖춘 이들을 산학점입교사로 배치하고 진로상담교사도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마이스터고에 확충한다. 교사들이 주전공에 더해 부전공을 익힐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에 충실해지면 자연스럽게 교사들도 수업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람을 느끼는 내적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개설 과목 수가 많은 전문교과 특성에 맞춰 수강신청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점제 안에서 보급과 컨설팅도 실시한다. 온라인 교육 또는 순회교사 등을 통해 개설이 어려운 과목도 지원할 방침이다.

## 음주운전 사고사망 31.3% 줄었다

### 제2운차호법 영향

경찰이 중점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 음주운전, 사업용 차량 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7월 말 기준)가 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보다 10.9% 감소한 186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63명(-31.3%) △사업용 차량 사고 67명(-15.7%) △보행자 104명(-13.2%) 등 분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세버스 4명(-28.6%) △렌터카 17명(-2.7%) △택시 22명(-19.6%) △화물차 23명(-18.5%) △시

내·시의·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9명(-17.6%) 등 모든 유형에서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제2운차호법’과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제와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 행위 등 사업용 차량 단속도 진행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44.2%) △부산(-42.9%) △서울(-27.0%) 등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지만 인천(25.4%)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고, 경기북부와 강원은 지난해와 사망자수가 같았다.

다만 65세 이상 사망자는 868명으로 지난해보다 4.9%(44명) 감소해 전체 사망자 감소율에 비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 이슈 판결

## 이사회 결의없이 대표가 회사 희생

### 신청...대법 “손해 배상해야”

#### 불법 신청 따른 배상책임 물어 퇴직금 깎은 원심 확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희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면 권한 밖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식회사 D기업 대표를 지낸 이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퇴직금 절반 중 회사 손해액을 제한 금액을 낸 나머지 지를 회사가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집행법상 퇴직금 절반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이씨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희생절차 개시신청은 대표이사 업무권한인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라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모씨는 “이씨의 희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의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라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하 이씨는 D사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체 D사에서 상무와 대표를 지내고 2016년 10월 해임된 이

씨는 회사가 이후 1년여가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자 임원 퇴직금 1억9838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D사는 이에 그해 8월 이씨가 법령과 정관을 어기고 이사회 결의없이 법원에 회사 희생절차를 신청해 입은 손해를 퇴직금에서 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D사는 희생절차 개시신청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고 이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배상책임은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퇴직금 2분의1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씨 퇴직금을 1억9838만여원으로 인정해 회사가 이중 절반을 제한 991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2심은 퇴직금 절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물어 991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1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제치료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